

연구자료

인도지원 2025-03-118



인도적 지원 국내 파트너십 발전 방안 연구 국영문 요약

2025. 01

인도적 지원 국내 파트너십 발전 방안 연구 국영문 요약
Enhancing Korea's Humanitarian Public-Private
Partnership

2025. 01

한국국제협력단

저자

책임연구원

한재광

- 발전대안피다 대표

공동연구원

정지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송계희

- 前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선임매니저

이경주

-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부장

이경신

-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인도적지원
전문관

연구보조원

박준영

-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과장

조수안

-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간사

윤다솔

-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대리

보조원

김동현

-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대리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보고서에는 제3자에게 권리(저작권)가 있는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이용 허락은 사용자가 권리당사자에게 직접확인해야하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 하에 인용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표기 바랍니다.

한재광 외. 2025. **인도적 지원 국내 파트너십 발전 방안 연구 국영문 요약**.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본 자료는 KOICA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문 요약

I. 서론

- 한국 정부는 2023년 2월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발생 직후 정부-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긴급구호부터 조기복구 단계까지 인도적 지원 활동을 실시했다. KOICA는 3개 NGO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튀 우정마을 사업을 조성했으며, KOICA와 시민사회는 이 성과를 기반으로 포괄적 파트너십인 RAPID(Responseive Action and Partnership Initiative for Disaster, 해외재난대응협력 이니셔티브)을 신설했다.
- 본 연구는 ‘인도적 대합의(Grand Bargain)’ 및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원칙과 규범에 기반하여 민관(공공, 시민사회 및 기업 등) 협력체계 개선안 도출을 통해 국내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다.
 - 첫째, 타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을 분석 통한 국내 인도적 지원 생태계의 강점 반영한 포괄적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자원 확대 방안 제시
 - 둘째,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등 4개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체계의 특성과 역사적 발전 과정 분석 통해 핵심적 작동 기제(enabler) 제시, 핵심적 작동 기제 구축을 위한 장애요인 해소 방안 도출 및 RAPID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도출
 -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 분석하여 브랜드 공유, 모금 및 분배, 기금형 운영체계 등 포함한 인도적 지원 협업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실현 및 포괄적 이해관계자 간 협업의 성과 제고 가능하게 하는 파트너십 형성방안과 성과지표 제시
- 본 연구는 한국의 국내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민관(공공, 시민사회 및 기업 등) 협력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연구 범위를 설정했다.
 - 첫째,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글로벌 동향 및 정책 분석
 - 둘째, 4개 공여국(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의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 협력체계 조사·분석
 - 셋째, 국내 인도적 지원 분야 이해관계자 조사·분석하여 특성에 부합하는 포괄적 파트너십 체계구성

- 넷째, 국내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도출 및 홍보방안 구성
- 본 연구는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 체계를 도출한다. 구체적으로는 파트너십 협력체계, 파트너십 핵심작동기제(enabler)와 장애요인(disabler) 도출과 파트너십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제도개선안이다.
- 효과적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종합적 접근, 실제 사례 통한 교훈 중심 접근, 단계적 접근, 참여적 접근을 활용했다 그리고 ‘문헌조사’, ‘심층인터뷰’, ‘초점집단인터뷰’ 및 ‘이해관계자 워크숍’ 등 네 가지 조사방법을 실행했다.

II. 인도적 지원 민관파트너십의 원칙, 글로벌 동향 및 성과

1.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 원칙 및 인도적 대합의

- (GHD와 그랜드바겐 핵심 요지)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규범체계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GHD와 그랜드바겐이 제시하는 공통된 내용은 △인도적 지원 기금의 유연성 및 적시성 확보 △인도적 지원 재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년도 기금 확대 및 지정 기금 축소 △현지 주민(수혜자) 참여 보장 △인도적 지원-개발과의 연계 △공여국-수행기관 간의 보고 체계 표준화 및 간소화다. GHD가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공여국-수행기관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그랜드바겐은 현지화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2. 현지화

- (현지화를 위한 핵심공약) 그랜드바겐은 현지화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파트너십, 역량 강화, 자금지원, 조정을 제시한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공여국들은 현지화를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자금지원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현지화 이행 수준은 매우 저조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3. 국제 행위자들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동향

-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과 공동대응 파트너십) 주요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은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과 공동대응 파트너십으로 나뉜다. 정부-시민사회 간 협력 이유는 △수혜자 접근성 용이 △인도적 지원 신속성 △취약국/상황에서 활동 가능 △전문성 △혁신성 등이다. 공동대응 파트너십을 형성한 이유는 △급증하는 인도적 수요 대비 자원 부족 △대중

모금활동 중복으로 인한 재원의 분산 및 대중의 모금 피로도 증가 등이다. 공여국들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또는 민간단체 위주로 공동대응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도적 지원 자금 동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구체적으로는 12개 공여국들의 공동대응 플랫폼의 글로벌 연합체인 EAA가 있다.

III. 한국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 체계 분석

1. 한국 인도적 지원 및 RAPID 현황

- **(정부의 인도적 지원제도)** 정부는 「인도적 지원 전략」을 2015년 OECD DAC 동료검토 권고에 따라 수립했고, 이후 2017년 개정했다. 정부의 인도적 지원(해외긴급구호) 실적은 2017년 786억 원에서 2022년 2,923억 원 규모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24년의 경우 예산확정액 기준 7,346억 원으로 17년 대비 10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다.
-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시민사회 및 민-민 파트너십)** 정부-시민사회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은 2012년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출범과 함께 제도화됐다. 2012년 8개 단체의 해외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해 연간 약 20억 원의 규모로 시작했으며, 2024년 약 50억 원으로 확대했다. 시민사회와 기업의 참여를 통해 실시되는 인도적 지원 규모가 작지 않다. 2023년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전체 규모는 2,993억 원이며, NGOs가 자체 모금과 후원을 통해 실행한 인도적 지원 규모는 2,236억 원이다(KCOC, 2024). NGOs가 실행하는 인도적 지원 규모는 시민과 기업의 기부를 통해 그 재원을 형성한다.
- **(RAPID 출범)** 정부는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발생 이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인도적 지원 대응 활동을 전개했다. KOICA는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으로 추진한 「튀르키예 우정 마을 사업」을 모델로 하여 기존의 KOICA 인도적지원민관협력프로그램 내 인도적 민관협력 브랜드 「RAPID(Responsive Actions and Partnership Initiative for Disaster)」를 2024년 시작했다. RAPID는 현재 6개의 NGO(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월드비전, 희망친구 기아대책, KCOC), KOICA, 신한은행이 공동으로 조성한 재원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급성 식량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아프리카 급성 식량 위기’ 공동 대응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RAPID의 일원으로 KOICA와 MOU를 맺은 바 있다.

IV. 4개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민관파트너십 체계 현황 분석

1. 4개국의 특성 분석

○ **(4개국 인도적 지원 민관파트너십 체계현황)**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플랫폼의 제도적·사회문화적 환경, 설립 배경, 추진 체계와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플랫폼의 핵심 작동기제와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한국의 RAPID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 민관협력과 정책적 지원

- **(인도적 지원 예산 및 민관협력 규모)** 영국은 양자 ODA(공적개발원조) 중 인도적 지원 예산이 가장 큰 국가로, 예산은 약 1조 7천억 원 규모다. 캐나다와 일본이 각각 1조 3천억 원, 1조 2백억 원이며, 호주는 5천4백억 원으로 다른 3개국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 **(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정부의 정책적 지지가 각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다. 일본의 JPF와 캐나다의 HC는 정부가 NGO 활동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자원을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그랜트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정부의 영향력이 크다. 영국과 호주는 민간 주도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정부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NGO 활동의 효과성과 자금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정책적 제도 기반 구축)**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모두 정부가 민관협력을 공식적으로 장려하며, 정책적 제도 기반을 마련해 플랫폼을 뒷받침한다. 일본과 캐나다는 정부의 직접적 자금 지원 비중이 높아 정부 주도의 그랜트 관리가 플랫폼의 주요 역할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 정부는 JPF에 높은 비율로 자금을 지원하고, 외무성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전반적으로 정부가 크게 영향력을 미친다.

○ 자금 조달과 대중의 참여

- **(공동모금과 자원 동원 시스템)** 4개 국가의 플랫폼은 모두 공동모금 체계를 통해 대중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설계됐다.
- **(모금시장 및 기부문화)** 영국과 캐나다는 활성화된 모금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개인기부 참여율을 보인다. 영국 대중의 71%, 캐나다의 62%가 기부에 참여하고 있고 일본은 16%이다.

○ 플랫폼 설립 배경 및 운영 구조

- **(설립 목적과 회원구성)** 영국, 캐나다, 호주는 소수의 대형 국제 NGO를 중심으로 경쟁적 모금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공동모금을 하고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됐다. 일본 JPF는 열악한 국내 NGO의 대중 모금 환경을 개선하고 해외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리고 NGO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설립된 만큼 일본의 다양한 규모와 역량의 NGO들이 참여하고 있다.

- **(플랫폼 운영과 기능의 차이)** 영국, 캐나다, 호주는 NGO 주도로 자금의 공동모금, 배분, 긴급 대응, 홍보 기능에 집중하며, 자율성을 강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일본 JPF는 설립 초기부터 민간,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 운영하고 있으며, JPF의 의사결정 거버넌스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
- **(대응의 범위)** 영국 DEC, 캐나다 HC, 호주 EAA는 대형 인도적 위기에 대한 공동어필과 대응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캐나다 HC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 재난에 대해 지원한 기금을 바탕으로 대형 인도적 위기와 중소기업 재난 모두를 대응한다. 영국은 Start Network가 중소형 재난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 JPF는 타 플랫폼과 차별적으로 국내재난과 해외재난에 모두 대응하며, 대형 인도적 위기를 비롯하여 중소기업의 재난도 포함한다.

○ 투명성 및 책무성

- **(엄격한 책무성 및 투명한 자금 관리)** 4개국의 플랫폼은 자금 집행과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유지하고, 참여단체 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책무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일본의 JPF는 외부성이 지원하는 자금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단계마다 NGO들에게 자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보고와 검토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정부와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 그랜드바겐의 이행

- **(현지화 고려)** 4개국 모두 국가 차원에서 그랜드바겐에 서명하며 현지화를 지지하고 있다. 영미권 플랫폼의 경우에는 개별단체 차원에서도 그랜드바겐에 서명하고 자체적인 현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차원에서도 현지화를 지원하는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 **(현지화를 목표로 하는 플랫폼)** 중소기업 재난 대응에 특화하여 설립된 Start Network는 영국의 국제NGO 뿐 아니라 현지에 기반한 국가NGO와 지역NGO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로 현지 주도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혁신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 자원 모금 및 배분 체계

- **(공동모금)** 영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공동모금이 결정된 후 공동어필을 시작하는 2~3주 기간에는 회원NGO의 모금이 금지된다. 회원NGO들은 공동어필 기간 전후에만 개별적인 모금활동을 수행한다.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기업과 대중을 상대로 모금한 금액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 비율로 매칭하여 해당 재난에 대한 기여금을 확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 **(배분)** 4개국 플랫폼 모두 긴급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자금을 배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영국 DEC, 호주 EAA, 캐나다 HC는 NGO 주도의 자율적 배분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회원NGO들이 독립적으로 자금을 배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일본의 JPF는 NGO에 대한 분류 기준에 따라 배분금 상한선이 있으며, 프로젝트의 승인 및 배분 결정은 상한선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만 외무성의 승인이 필수조건이다.

○ 이해관계자 참여와 영향력

- **(미디어와의 협력 및 영향력)** 영국의 대중모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디어로 영국 국영방송인 BBC는 DEC의 운영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호주 EAA 역시 미디어가 대응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정부와의 협력 및 영향력)** 일본과 캐나다의 공동모금플랫폼은 상대적으로 미디어의 영향력보다는 정부의 영향력이 더욱 크며, 정부재원 비율이 각 76%, 88%에 달한다. 일본은 정부 재원이 보조금으로 집행되며, 캐나다의 경우 대형재난의 대중모금에 대한 1:1 매칭기금과 더불어 중소기업 재난을 위한 그랜트(CHAF)가 지원된다.
- **(NGO 협의체와의 협력)** 각 국가의 플랫폼은 기존의 민간단체 협의체와 상호보완적인 역할과 기능을 유지한다. 일본 JPF의 회원 가입 조건 중 하나로 단체는 반드시 JANIC의 회원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호주의 EAA와 캐나다의 HC에서도 동일하다.
- **(NGO 생태계 영향)** 일본의 JPF를 제외한 영미권 3개 국가는 각 플랫폼 회원 수가 12~15개로, 주로 대형 국제 NGO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을 위해 회원 기관이 일정 수준의 사업 규모, 국제적 네트워크, 국제 책무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가입기준 때문이다.

○ 성과 관리 체계

- **(사업평가)** 각 플랫폼은 진행된 대응 활동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와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방식은 내부 평가와 외부 독립평가, 동료평가, 현장평가 등의 인도적 지원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 **(파트너십 평가)** 파트너십 자체에 대한 별도의 평가체계를 구축한 플랫폼은 없다. 다만 자체적인 워크숍이나 정례 회의 등의 과정을 통하여 파트너 간 피드백을 교환하며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파트너십 평가를 진행한다.

2. 4개 공여국 사례연구 통한 RAPID에 대한 시사점

○ 4개국 사례에서 도출하여 RAPID에서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은 제도적 차원, 이해관계자 차원, 운영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다.

○ 제도운용

- **(정부의 제도적 지원 마련)** 인도적 지원 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관협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민관파트너십의 지속성과 대표성 확보)** RAPID와 같은 민간 주도의 프로그램이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브랜드 가시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부 영향력의 범위와 수준 설정)** 독립적인 비영리 민간법인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 수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효과적이고 보완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 **(다양한 전략적 선택 가능성 제공)** 정부 주도의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민간이 주도하는 다양한 지원 채널(호주 EAA 등)을 도입하여 정부가 다양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 인도적 지원 공간을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분리된 원칙에 기초하여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해관계자 참여 차원

- **(대정부 관계 균형 확보)** 정부 관계에 있어 균형 잡힌 협력구조를 지속하고 발전시키는 것과 더불어 플랫폼으로서의 정부재원 의존도를 낮추고 대중 후원을 확대하여 재원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업의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 기업이 단순 후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인도적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NGO 생태계 분석과 그에 따른 방향 설정)** 플랫폼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 중 동료 NGO 네트워크와의 상호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 **(미디어 영향력 고려)** 영국과 호주의 사례처럼 대국민 인식 제고와 대중 모금 확대를 위해 미디어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때로는 플랫폼의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져 인도적 지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도 주의해야 한다.

○ 플랫폼 운영

- **(RAPID 플랫폼 설계)** RAPID를 어느 주체가 어떤 목적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플랫폼의 목적과 운영 방향을 좌우하므로, RAPID는 한국의 상황에 맞는 플랫폼 회원구성과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시도 촉진)** 한국의 RAPID 플랫폼은 기존 공여국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참여단체들이 RAPID를 통해 새로운 시도와 실험적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혁신적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해외 재난 대응의 대표적 민관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국내외 인도적 지원 대응 NGO 플랫폼으로서 대표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여적 의사결정 및 학습 공간 확보)** 4개국 플랫폼 모두 회원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워킹그룹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체 간 학습과 교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포용적 플랫폼 구성)** RAPID의 파트너십은 한국 NGO 생태계, 정부 자원 규모와 ODA 및 인도주의 정책/전략을 고려하여 소수의 대형 NGO에게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분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NGO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파트너십 참여단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 **(역량 편차의 보완 장치)** 다양한 NGO의 참여는 생태계의 포용성을 강화하지만, 그만큼 기관 간의 역량 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 **(독립된 사무국 설치 및 전문성 강화)** 4개국 모두 독립적인 사무국이 설치되어 플랫폼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신속하고 유연한 자금 집행)** 인도적 지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유연한 자금 집행 절차를 마련하여 긴급구호와 같은 인도적 지원 활동의 즉각적인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공동 브랜드로서의 가치와 영향력 유지)** 공동 브랜드로서의 가치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용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참여단체의 기준, 플랫폼의 미션을 명확히 하여 플랫폼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V. RAPID 발전 제안

○ 본 연구는 RAPID 발전을 위한 두 가지 방향의 제안을 한다. 첫째는 현재 ‘RAPID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둘째는 현 RAPID가 공동모금플랫폼으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한 ‘공동모금플랫폼’이다.

1. RAPID 활성화 및 공동모금플랫폼 방안

○ 목적

-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한국 긴급대응 포괄적 파트너십(RAPID)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 미션

- 인도적 위기 해소에 기여한다.
- 이재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한국의 다양한 행위자(정부, NGO, 기업, 미디어 등)들이 협력한다.

○ 원칙과 가치

- 국제사회가 합의한 인도적 지원의 기본원칙과 파트너십 원칙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파트너십 모델을 지향한다. 원칙으로 인도성(Humanity), 평등 (Equality), 결과 지향 (Results-Oriented Approach), 상호보완(Complementarity), 투명성과 책무 (Accountability)을 제시한다. 지향해야 할 가치로는 사람 중 (People-Centered), 상호신 (Mutual Trust), 현지중심(Local-Centered), 상호학습(Mutual Learning), 질적제고 (Quality Improvement)를 설정한다.

○ 구성단위

- RAPID 플랫폼은 RAPID 멤버(RAPID 및 RAPID Plus), RAPID 파트너, 사무국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RAPID 멤버단체로는 RAPID 단체와 RAPID Plus 단체가 있다. RAPID 파트너 기관은 멤버단체는 아니지만, RAPID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와 같은 공공기관과 기업, 미디어,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다. RAPID 사무국은 RAPID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KOICA 및 멤버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하여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실무를 집행한다.

○ 사업 구분

RAPID 활성화 단계는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의 사업을 추진한다.

- **민관합동대응사업(RAPID Integrated Response)**: 대형 인도적 위기 발생 시 정부와 NGO, 적십자,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행하는 RAPID 통합 브랜드 사업으로서 대응의 영향력과 가시성 확산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긴급구호와 복구, 재건단계에서 정부와 민간 간 합동 사업 추진하는데, 사업의 공동기획 및 공동수행을 주 내용으로 하며, RAPID 민관합동대응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하나의 브랜드 사업으로 진행한다.
- **민간공동대응사업(RAPID NGO Joint Response)**: 특정 긴급한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RAPID 단체들의 사업이다. RAPID 차원의 공동의 대응목표(outcome)를 설정하고 각 참여단체들의 사업(output)을 통하여 공동 대응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 **RAPID Learning Lab 사업**: RAPID 내 학습과 혁신성 제고를 위한 공간으로 작동한다. 이는 크게 혁신적 접근, 실증연구, 동료학습, 현지주도대응과 같은 네 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 사업 참여방식

- RAPID가 시행하는 이상의 3가지 사업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RAPID 멤버인 RAPID 단체와 RAPID Plus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방식 1. RAPID 단체 단독참여형: RAPID 단체들만 참여
 - 방식 2. RAPID Plus 단체 컨소시엄 참여형: 매 사업기간(2년) 심사를 통해, RAPID 단체 자격요건을 갖춘 RAPID Plus 단체 컨소시엄을 심사해, 선정된 컨소시엄을 RAPID 단체로 인정하고 동등한 자격 제공

○ 운영조직

- 운영위원회는 RAPID 단체, KOICA 담당 조직, 운영기관 담당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역할은 RAPID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사업 운영관리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RAPID 프로그램 운영 방식 전반 협의, 사업 대응 분야 선정, 필요시 현지 조사 및 공동 모니터링 실시, 분기별 정기회의 실시 등이며, 긴급상황 발생 시 임시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 사무국은 RAPID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의 운영기관을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사무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관련 인력, 재정을 지원한다. 기능은 RAPID 멤버관리, 배분 및 사업관리, RAPID 파트너 기관관리, 성과관리, 인지제고 및 성과홍보 등이다.

○ 브랜드 홍보

- 미디어와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RAPID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RAPID 활성화 단계에서의

성과와 사례를 대국민과 기업, 정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브랜드 홍보 전략을 수립한다.

- 추진 수단은 공중파 방송과 같은 전통적 수단과 유튜브, SNS, 팟캐스트와 같은 효율성이 높은 수단을 활용한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홍보를 추진한다.

○ 핵심작동기제

- Macro level의 제도적 측면의 핵심작동기제는 정부의 ODA 정책 중 NGO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예산 증대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도적 지원 생태계 내 다양한 유형의 NGO 존재 및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
- Meso level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부-시민사회 공동대응 모델 활성화와 개발NGO 외 다양한 미디어, 기업, 공공기관 및 기타 주체의 참여 공간제시가 중요하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대형 외 중견 단체들의 참여방식 제공이 핵심작동기제다.
- Micro level의 제도적 측면의 핵심작동기제는 안정적 자원 확보(RAPID 단체)이고, 중견단체에게 참여 기회 제공(RAPID Plus단체)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참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와 RAPID 참여단체라는 신뢰성 그리고 공동모금 참여에 대한 동료 간 긍정적 압박(Peer pressure), 혹은 집단적 참여의식 및 불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핵심작동기제로 기능한다.

○ 장애요인

- Macro level의 제도적 측면의 장애요인은 정부의 ODA 정책 중 NGO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낮은 우선순위화와 작은 예산규모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NGO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분쟁 상황에서의 개입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이다.
- Meso level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부 중심의 프로그램 운용과 대형단체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참여기관 제한이 장애요인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소수단체 참여로 인한 NGO 사회의 전반적 지지 확보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 Micro level의 제도적 측면의 장애요인은 참여단체에 비해 작은 예산규모와 중견 단체에게는 참여가 어려운 제도다. 사회문화적 측면의 장애요인은 중견단체에게는 자부담이 부담으로 작동하는 점이다.

○ 선결과제

- Macro level의 제도적 측면의 선결과제는 RAPID 브랜드에 대한 대외 이미지 제고와 정부의 안정적 지원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해외 인도적 위기 해결에 대한 국민의 연대 의식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가 선결되어야 한다.

- Meso level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지속적 예산 확대와 대형단체 외 중견단체 참여방식의 효과적 운용 그리고 대한적십자의 효과적 참여를 위한 제도 정비, 성과홍보를 위한 미디어와의 협력체계 정비, 학계/연구기관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적 정비가 중요하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단체 간 경쟁 완화 및 협동심 향상, KCOC의 기여 및 대형단체와 중견단체 간 권력균형(power balance)이다.
- Micro level의 제도적 측면의 선결과제는 정부의 예산 확대, 공동어필·모금에 참여하는 영향력 있는 미디어와의 협력체계 정비, 기업의 공식적인 참여 그리고 학계/연구기관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적 정비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공동플랫폼이 결국 모금의 효과성 및 참여를 꾀리는 단체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

○ 주체별 참여유인

- NGO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 긴급대응 분야의 안정적 예산확보, 정부 협력 통한 국내외, 기관 내 신뢰성 제고, 한국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 생태계 확대 기회 확보가 중요하다.
- 정부에게는 해외 인도적 위기 해소에 대한 효과적 기여,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증대, 신뢰성 있는 인도적 지원 NGO 생태계 구성 지원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사회의 인도적 지원 발전 도모, 인도적 지원 전문기관 및 전문가 풀 확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디어, 기업, 공공기관 및 학계/연구기관의 참여 공간 제시가 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주도 긴급 대응브랜드 참여 당위성과 인도주의 수호 기관으로서의 참여 당위성이 중요하다.
- 미디어에 대해서는 글로벌 인도적 위기 해소에 기여하는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와 NGO와의 협력 통해 다양한 방송자원 확보가 미디어의 참여유인이다.
- 기업에게는 ESG 실천 수단의 확보, 국제사회 인도적 위기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확보와 신뢰성 있는 NGO들에 대한 기부 그리고 정부 및 NGO들과의 협력 기회 제공과 기업들의 참여를 유인하는 것들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 학계/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실증연구 기회 확보 및 학술실적 제고가 중요하다.

2-2. 공동모금플랫폼 방안

○ 목적

- 한국 민간의 주체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공동모금 플랫폼을 구성해 해외 인도적 위기 해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 미션

- NGO들의 공동모금의 장을 마련하여 기금 모금을 극대화한다.
- 해외 인도적 위기 대응에 정부, 공공기관, 일반 대중, 기업, 방송사 및 기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한다.
- 해외 인도적 위기에 대한 한국 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인지를 제고하고, 참여를 증진한다.
- 해외 인도적 위기 대응에 참여하는 NGO, 정부, 공공기관, 기업, 미디어 등 기관 간 협력, 조정 및 소통을 촉진한다.
- 공동 모금된 기금을 형평성 있게 참여 NGO에 배분하고,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하며 책무성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한다.

○ 원칙과 가치

- 국제사회가 합의한 인도적 지원의 기본원칙과 파트너십 원칙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파트너십 모델을 지향한다. 원칙으로는 인도성(Humanity), 상호신뢰(Mutual Trust), 평등성(Equality), 결과 지향(Results-Oriented Approach),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과 투명성과 책무성(Accountability)을 설정한다. 가치로는 사람 중심(People-Centered), 현지중심(Local-Centered), 상호학습(Mutual Learning), 질적제고(Quality Improvement)를 제시한다.

○ 구성단위

- 공동모금플랫폼은 공동모금에 참여하는 멤버단체, 파트너 그리고 사무국을 총괄하는 명칭이다. 공동모금플랫폼 멤버단체는 긴급한 인도적 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금과 사업 차원의 체계와 역량을 보유한 NGO로 구성한다. 공동모금플랫폼 파트너기관은 NGO 외에 공공기관, 기업, 미디어,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로 각각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동모금에 기여하는 기관들이다. 사무국은 공동모금플랫폼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법인으로 공동어필, 공동모금 및 배분과 그 외 책무성, 파트너십 관리 등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사업단계

- 공동모금플랫폼은 해외 인도적 위기 발생 시 멤버단체들이 신속하게 대응 여부를 결정하고,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호소하는 공동어필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모금을 한다. 이후에는 대중 모금한 기금(개인, 기업, 기관 대상 모금 및 정부 제공 ODA)을 멤버단체들에 배분한다. 단체들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사무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평가를 실행한다. 사업 종료 후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다.

○ 운영

- 공동모금플랫폼 운영은 이사회, 위원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사회는 공동모금플랫폼 멤버단체 대표, KCOC 대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어필위원회, 배분위원회, 책무성위원회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공동모금플랫폼의 이사회와 위원회 멤버단체 및 정부, 미디어 기업, 공공기관 등 파트너 기관 간의 협력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동모금플랫폼 멤버관리, 공동어필·모금, 배분 및 사업관리, 정부 대응, 공동모금플랫폼 파트너 기관관리, 성과관리, 인지제고 및 성과홍보 등을 담당한다.

○ 브랜드 홍보

- 공동모금플랫폼 브랜드의 홍보방안의 핵심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공동모금플랫폼에 활용할 브랜드 슬로건 수립이다. 둘째는 브랜드 홍보와 공동모금 효과 제고를 위한 전략 및 계획 수립이다.

○ 핵심작동기제

- Macro level의 제도적 측면의 핵심작동기제는 공동모금플랫폼을 규정하는 법적 기반과 모금에 참여하는 주체에 대한 세제혜택(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동일 수준)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도적 지원 생태계 내 다양한 유형의 NGO 존재 및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가 중요하다.
- Meso level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개발NGO 외 다양한 미디어, 기업, 공공기관 및 기타 주체의 참여 공간제시가 중요하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해외 인도적 위기 공동모금플랫폼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핵심작동기제다.
- Micro level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참여 NGO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약속하는 공동모금방식 및 배분공식이 핵심작동기제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공동모금플랫폼에 참여하는 단체라는 신뢰성 그리고 공동모금 참여에 대한 동료 간 긍정적 압박(Peer pressure),

혹은 집단적 참여의식 및 불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공동모금 외 상호학습에 대한 이점이 중요하다.

○ 장애요인

- Macro level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공동모금플랫폼을 규정하는 엄격한 법적 기반과 타 모금기관에 비해 불리한 세제혜택, 그리고 상존하는 유사한 공동 또는 개별모금기관이 장애요인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공동모금 방식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낮은 인식과 신뢰도, NGO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 그리고 분쟁 상황에서의 개입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이 장애요인이다.
- Meso level의 제도적 측면의 장애요인은 최초의 인도적 지원 분야 공동모금플랫폼 운영이라는 사회적 낯섦, 대형단체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참여기관 제한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소수단체 참여로 인한 NGO 사회의 전반적 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장애요인으로 기능한다.
- Micro level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해외 인도적 위기 미발생 시의 활동에 대한 준비 부족, 참여단체에 비해 작은 공동모금 및 사업비 배분 그리고 중견단체에게는 사업참여가 어려운 제도가 장애요인으로 작동한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대형단체에게는 공동모금이 개별모금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고 기존 기업 및 기관 후원자들의 반대 그리고 단체 구성원들의 반대가 중요하다.

○ 선결과제

- Macro level의 제도적 측면의 선결과제는 설립 과정에 대한 정부 및 국회의 법적, 정책적 제도지원과 타 공동모금기관 수준의 세제혜택 및 초창기 몇 년간 정부의 일정한 ODA 자금제공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해외 인도적 위기 해결에 대한 국민의 연대 의식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부문화 촉진이 중요하다.
- Meso level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대형단체 외 중견단체 참여방식의 효과적 운용과 효과적 사무국 구성 그리고 운영 부문에 대한 일정 규모의 정부의 ODA 자금제공이 중요하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대형단체의 선도적 기여, NGO 협의체인 KCOC의 기여, 참여단체 간 경쟁 완화 및 협동심 향상 및 대형단체와 중견단체 간 권력균형(power balance)이 중요하다.
- Micro level의 제도적 측면의 선결과제는 정부의 예산 확대와 공동어필·모금에 참여하는 영향력 있는 미디어와의 협력체계 정비 그리고 기업의 공식적인 참여와 학계/연구기관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적 준비가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NGO 간의 공동협력이라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단체들의 기존 후원자들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하다.

○ 주체별 참여유인

- NGO의 참여를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 긴급대응 분야의 안정적 예산확보, 공동협력방식 통한 국내외 및 기관 내 신뢰성 제고, 인도적 위기에 대한 개별 모금과정에서의 조직적, 인적, 재정적 비용감소, 공동어필·모금, 배분 및 사업수행과 M&E 과정에서의 학습, 해외 인도적 위기 대응과정에서의 지나친 단체 간 모금경쟁 피로도 해소, 공동모금을 통한 신규 후원자 개발 기회 확보가 중요하다. 증견단체에게는 공동어필·모금단계에서 대형단체의 자원(사진, 사례 등) 및 기법 공유받으며, 개별적으로는 어려운 미디어 접근성 제고 기회 확보, 한국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 생태계 확대 기회 확보 등이 참여유인으로 작동한다.
- 정부에게는 해외 인도적 위기 해소에 대한 효과적 기여,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증대, 신뢰성 있는 인도적 지원 NGO 생태계 구성 지원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사회의 인도적 지원 발전 도모가 중요하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 전문기관 및 전문가 풀 확대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디어, 기업, 공공기관 및 학계/연구기관의 참여 공간제시도 의미가 있다.
- 미디어의 참여를 위해서는 글로벌 인도적 위기 해소에 기여하는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와 NGO와의 협력 통해 다양한 방송자원 확보가 중요하다.
- 기업에게는 ESG 실천 수단의 확보와 국제사회 인도적 위기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확보, 신뢰성 있는 NGO들에 대한 기부 및 정부 및 NGO들과의 협력 기회 제공이 참여를 위한 요소로 중요하다.
- 공공기관에게는 모금한 자금의 효과적이며 신뢰성 있는 배분처 확보가 중요하다.
- 학계/연구기관에게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실증연구 기회 확보 및 학술실적 제고가 참여를 위한 중요한 유인책으로 기능한다.

2-3. RAPID 활성화 및 공동모금플랫폼 추진 방안

- 현재 추진 중인 정부-시민사회 인도적 지원 긴급대응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서의 RAPID를 향후 활성화하고 나아가 공동모금플랫폼으로 발전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1안 - RAPID 활성화와 공동모금플랫폼 병행

○ 내용

- **(RAPID 활성화와 공동모금플랫폼 병행운용)** KOICA의 긴급대응 프로그램인 RAPID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특정 시기에 공동모금플랫폼을 시작하여 병행한다. RAPID는 정부가 ODA 자금을 역량 있는 NGO에게 제공해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긴급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공동모금플랫폼은 NGO의 자율성에 기반해 공동모금을 하고, 이에 정부가 ODA자금을 지원하여 효과적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 장점과 단점 및 대응방안

- **(장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수행 프로그램인 RAPID와 시민사회와 민간기관의 자율적 공간과 정부의 협력모델인 공동모금플랫폼 병행으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다원적 운용과 이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참여 기회 확대가 가능하며, 아울러 개발NGO들의 인도적 지원 실행 기회도 확대될 것이다.
- **(단점 및 대응방안)** 사회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관심 부족 등 제도 시행 여건이 미비한 가운데, 동시에 두 개의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 인해 관심과 역량에 대한 집중력이 분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안 - 공동모금플랫폼 운영

○ 내용

- **(RAPID의 공동모금플랫폼 전환)** KOICA의 긴급대응 프로그램인 RAPID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한국 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이 제도화되며,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제도적 여건이 성숙화되면 기존 긴급대응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RAPID를 종료하고, 공동모금플랫폼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 장점과 단점 및 대응방안

- **(장점)** 인도적 지원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관심과 역량을 공동모금플랫폼으로 집결하여 효율적으로 모금을 시행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열매’와 같이 한국 사회의 해외 인도적 지원 분야 대표 브랜드로 국가와 사회적 상징으로 작동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단점 및 대응방안) 공동모금플랫폼은 해외의 대형 긴급 인도적 지원 상황에만 대응하기에, 활동이 없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호주 EAA나 현 RAPID 동아프리카 식량위기 대응과 같이 만성재난의 긴급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시민사회의 경우 공동모금플랫폼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형 NGO들이 자체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금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NGO가 자체적으로 일정 규모의 모금 및 사업을 수행해 이를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공동모금플랫폼 멤버 확대 기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성과관리틀 및 성과지표

- (RAPID 발전단계별 지표 제시) 본 연구에서는 앞서 RAPID 발전방안에서 제시한 RAPID 활성화 단계와 공동모금 플랫폼 단계에 대한 변화이론(ToC: Theory of Change) 형태의 성과관리틀을 구성하고, 각 단계의 단기, 중장기 성과목표 달성의 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 풀을 제시하였다.

3-1. RAPID 활성화 단계

- RAPID 활성화 단계 변화이론에서는 최상위목표를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한국 긴급대응 포괄적 파트너십(RAPID)의 효과성 극대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성과목표와 단기성과목표를 제시하였다. 4개의 중장기 성과목표는 공동사업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브랜드 가시성 제고, 포용성 강화, 자원 확대다. 단기성과 목표로는 인도지원 지원범위(coverage) 확대, 인도지원 질적 개선, 인도지원 통합성과데이터 활용성 증대, 공동인지제고 확대, 공동성과 홍보 강화, 참여유형/참여NGO 확대, 참여단체 역량강화 기회 확대, 파트너기관 확대, RAPID 지원 KOICA ODA예산 확대, RAPID 동원 민간재원 확대 등 10개를 설정했다. 성과목표에 대한 지표는 시스템 차원의 지표로 성과와 산출물 수준으로 총 16개를 시너지효과 제고 차원의 지표로 성과와 산출물 수준으로 총 14개를 제시했다.

○ 모니터링

- 2025년 중 RAPID 활성화의 방향성이 구체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위한 대표 산출/성과지표를 설정한 후에는 지표별 기초선 데이터를 수집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연도별 데이터 변화를 추적하되 지표별로 주기는 좀 더 짧아질 수 있다.
- RAPID 프로그램의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지표별 종료선 데이터의 수집은

활성화 1차년도인 2025년, 2차년도 2026년 이후 활성화의 성과를 어느 정도 파악 가능한 시점인 (빨라도) 2027년 이후 정도에 가능할 것이다. 정책적 수요 혹은 성과 근거에 대한 상위부처 요청 등에 따라 2026년 정도의 시기에 해당 시기까지 발현하고 수집 가능한 데이터만을 모아서 중간평가도 고려할 수 있다.

○ 성과평가

- RAPID 프로그램의 이행성과에 대한 파트너십 프로그램 (성과)평가는 2027년 이후 시점에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 해당 평가는 프로그램 층위에 대한 전략평가(strategic evaluation)의 성격을 띠며, 아래 제시한 변화이론(성과관리틀)을 기반으로 의도한 성과목표 달성여부/정도 및 작동/비작동요인을 파악하는 이론기반 평가(theory-based evaluation) 접근을 취할 수 있다.
- RAPID 프로그램 종합평가의 핵심 평가질문(key evaluation question)은 △시스템 차원의 의도한 가치창출, 즉 재원 확대/포용성 강화/브랜드 가시성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공동사업(파트너십) 차원에서 시너지효과가 창출되었는가? 즉, 인도지원 범위 확대, 현지화/준비도 및 신속대응도/혁신성 강화 등 인도지원 사업 질적제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RAPID 프로그램 성과목표 달성/미달성/부분달성의 작동요인과 비작동요인은 무엇인가? 등이 가능하다. 단, RAPID 활성화의 방향성 및 채택/이행된 제언의 범위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한 [그림 30]의 변화이론을 조정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조정된 변화이론을 기반으로 핵심 평가질문을 설계할 수 있다.

3-2. 공동모금플랫폼 단계

- 공동모금 플랫폼 단계의 변화이론에서는 최상위목표를 ‘글로벌 인도적 위기 해소에 대한 한국 공동모금플랫폼의 기여 확대’로 설정하고 중장기성과목표, 단기성과목표를 제시하였다. 3개의 중장기 성과목표는 플랫폼 글로벌 위상 강화, 플랫폼 활성화, 재원 확대다. 단기 성과목표로는 플랫폼 가시성 제고, 글로벌 성과공유 확대, 플랫폼 참여 파트너 확대, 플랫폼 참여주체별 전문성 활용강화, 공동모금 플랫폼 지원 ODA예산 확대, 공동모금 플랫폼 동원 민간재원 확대 등 6개를 설정했다. 성과목표에 대한 지표는 장기, 단기성과와 산출물 수준으로 총 13개를 제시했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The global humanitarian landscape has evolved with increasing demands for inclusivity, transparency, and coordination in response to crises. The 2016 World Humanitarian Summit introduced the Grand Bargain, emphasizing localization, accountability, and effective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Korea, as a signatory since 2020, has aimed to align its humanitarian aid efforts with these principles. Despite grow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or humanitarian support, Korea's PPPs remain limited in scope and engagement, with minimal private sector involvement.

The 2023 Türkiye-Syria earthquake response highlighted the potential of collaborative disaster relief when KOICA partnered with NGOs to establish the Korea-Türkiye Friendship Village. This initiative showcased the benefits of joint disaster relief efforts, setting a precedent for expanding Korea's humanitarian PPPs through the Responsive Action and Partnership Initiative for Disaster (RAPID)—a KOICA-led platform designed to foster coordinated disaster responses. However, RAPID's success requires addressing key barriers, such as rigid funding mechanisms, limited stakeholder alignment, and insufficient visibility.

This study aims to enhance RAPID by identifying enabling mechanisms, addressing operational challenges, and proposing strategies for inclusive humanitarian partnerships. The study's key objectives are:

- To analyze global best practices in humanitarian partnerships from Japan, the UK, Australia, and Canada to identify enablers relevant to Korea.
- To assess domestic stakeholder roles, capacities, and challenges to inform an improved partnership framework.

- To propose policy recommendations for strengthening stakeholder engagement, resource mobilization, and operational efficiency through RAPID.

The research adopted a mixed-methods approach, including document analysis, field research in four donor countries, and participatory workshops with government agencies, NGOs, and private sector representatives to ensure comprehensive, stakeholder-driven insights.

2. Humanitarian Partnership and National Joint Appeal Platforms

As global humanitarian responses increasingly emphasize localization, flexible funding, and coordinated emergency action, partnership platforms play a crucial role in mobilizing resources efficiently and protecting crisis-affected populations. Strengthening partnerships across sectors fosters inclusive governance, agile operations, and shared decision-making, making humanitarian responses more effective and accountable.

The study examined national joint appeal mechanisms in the form of humanitarian partnership platforms in four donor countries: the UK, Japan, Canada, and Australia. These platforms demonstrate diverse models shaped by their national contexts, with varying governance structures, government involvement, public engagement strategies, and funding mechanisms. By analyzing these platforms, Korea's RAPID initiative can identify key elements to strengthen its structure, governance, and operational effectiveness.

1) Japan (Japan Platform, JPF)

- Japan's Japan Platform (JPF) takes a contrasting approach, with a strong reliance on government funding—approximately 76% of its total budget comes from the government. JPF operates as a joint platform for the Government of Japan, NGOs, and corporate partners, ensuring predictability in funding, stakeholder engagement,

and rapid disaster responses. The platform's unique corporate membership model includes over 100 companies, fostering cross-sector partnerships. JPF's governance structure involves direct government participation, particularly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hich plays a significant role in decision-making and project approvals. While government support ensures stable funding, it also poses challenges to the platform's autonomy and independence.

2) United Kingdom (Disasters Emergency Committee, DEC & Start Network)

- The UK's Disasters Emergency Committee (DEC) stands out for its strong media partnerships and public fundraising model. It is highly independent from government influence, with less than 5% of its funding coming from public funds. DEC's close collaboration with major media outlets like the BBC enables rapid, large-scale fundraising for major disasters, raising public awareness and increasing trust in overseas disaster appeals. The DEC Accountability Framework ensures transparent reporting and program evaluations, further enhancing public confidence in the platform's operations.
- Another significant UK initiative is the Start Network, which focuses on innovative and localized funding approaches for small and medium-scale crises. The Start Network promotes locally-led respons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imely funding for underfunded emergencies.

3) Canada (Humanitarian Coalition, HC)

- Canada's Humanitarian Coalition (HC) operates as a key government partner, with over 75% of its funding coming from government grants. The HC plays a critical role in managing the Canadian government's humanitarian funding, responding to both large-scale and small-scale crises. The platform's governance system integrates localization principles by requiring member NGOs to engage local partners in their response efforts.

- Multi-year agreements between the HC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provide predictability in funding and improve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member NGOs. Additionally, the HC's performance-based funding mechanism ensure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resource allocation, fostering trust among stakeholders.

4) Australia (Emergency Action Alliance, EAA)

- Australia's Emergency Action Alliance (EAA) is the most recently established platform, operating primarily as a private initiative with strategic government support for specific emergencies. The EAA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dopting an inclusive approach to emergency rapid response by engaging media, NGOs, and corporate partners in joint appeals and fundraising efforts.
- The platform works closely with national media outlets such as ABC and SBS to raise public awareness and secure donations. EAA's focus on swift and transparent fund distribution ensures timely responses to humanitarian needs, fostering public trust in the platform's operations.

The joint appeal platforms examined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ngaging diverse stakeholders, including governments, NGOs, media, and corporations. These platforms promote cross-sector collaboration that leverages collective resources for timely, impactful responses to emergencies. They also build public trust by ensur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use of funds.

3. Korea's Humanitarian Partnership Scheme

This chapter offers a detailed analysis of the legal foundations of South Korea's humanitarian aid system, its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the development of the RAPID program. It highlights significant achievements, identifies key challenges, and provides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scope of South Korea's humanitarian aid efforts.

-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South Korea's humanitarian assistance operates under robust laws, including the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Overseas Emergency Relief Act. These laws guide the government's emergency response and international aid efforts. However, the focus on immediate disaster response limits their ability to address chronic crises. The Humanitarian Assistance Strategy, updated in 2017, expanded the scope of government decision-making but lacks binding authority compared to formal legislation.
-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Humanitarian Aid:** The evolving rol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s emphasized through the Humanitarian Assistance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gram. This initiative has enabled NGOs to contribute to disaster response and risk reduction efforts. However, reliance on large NGOs excludes smaller organizations, hindering broader collaboration. Successful case studies, such as the Türkiye-Syria earthquake response, showcase the potential for coordinated efforts among government, NGOs, and local actors.
- **RAPID Program: Development and Functionality:** Launched in 2024, RAPID serves as a strategic partnership platform for collective humanitarian action. It aims to enhance collaboration among stakeholders, including government agencies, NGOs, corporations, and media. Pilot projects, such as addressing the acute food crisis in East Africa, demonstrate RAPID's capacity to mobilize resources effectively and deliver measurable outcomes. Standardized performance metrics ensur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Key challenges for RAPID include limited funding, a narrow stakeholder base, and the absence of clear operational guidelines. Expanding financial resources, engaging small and medium-sized organizations, and improving stakeholder diversity are highlighted as priorities. Stronger branding and public engagement are also recommended to raise RAPID's visibility and impact.
- **Stakeholder Insights and Recommendations:** Stakeholder analysis reveals broad support for RAPID's objectives but emphasizes the need for better coordination and inclusivity. Government agencies stress the importance of clear governance structures,

while NGOs call for expanded participation and capacity building. Corporations and media underscore the value of transparency and alignment with humanitarian principles to sustain their involvement. Stakeholders advocate for tax incentives, independent governance, and a potential transition to a collaborative fundraising platform.

Key Enablers, Barriers, and Incentives for Participation

Level	Key Enabler	Barrier	Incentive
Macro	Legal and policy frameworks	Funding inflexibility	Tax incentives and recognition programs
Meso	Coordination platforms	Limited data-sharing	Access to pooled resources and joint branding
Micro	Capacity-building programs	Administrative burdens	Training, visibility, and simplified processes

This table outlines key mechanisms that influence RAPID’s effectiveness, highlighting strengths to leverage and areas for improvement.

4. Policy Recommendations

The recommendations focus on two phases: the RAPID activation phase and the joint fundraising platform phase.

Drawing upon th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RAPID activation phase and the Joint Fundraising Platform phase, this study proposes a **results framework** in the form of a **theory of change**. The framework outlines the **enablers and preconditions** necessary to strengthen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emergency assistance in Korea, along with **short-term, mid-to-long-term, and impact-level objectives**. For each level, key **performance, output, and outcome indicators** are identified. The study recommends that KOICA and relevant stakeholders regularly **collect data, monitor progress, and evaluate outcomes** of Korea’s Humanitarian Partnership scheme using these indicators to ensure accountability and continuous improvement.

4.1 RAPID Activation Phase

The overarching goal of the RAPID activation phase i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Korea's emergency response partnerships. This phase addresses key challenges such as fragmented emergency responses, insufficient visibility of the RAPID brand, low inclusivity, limited expertise, and funding constraints. To achieve this, the framework outlines the following core objectives:

○ **Inclusiveness and Stakeholder Engagement:**

Expand participation to ensure a diverse range of organizations with varying capacities can contribute effectively to the platform. Strengthen engagement with private corporations, media outlets, academic institutions, and specialized organizations with technical expertise. Introduce **RAPID Learning Labs** to promote cross-sector collaboration, enhance stakeholders' operational capacities, and foster innovation in humanitarian fundraising and response.

○ **Capacity Strengthening:**

Offer comprehensive learning programs to enhance the operational capacities of partner organizations across various sectors. These programs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technical skills, management systems, and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standards.

○ **Funding and Resource Mobilization:**

Increase the ODA budget allocated for the RAPID platform to ensure stable and flexible funding for emergency responses. Diversify funding sources by engaging private companies, foundations, and the general public to strengthen long-term resource mobilization efforts.

○ **Visibility and Branding:**

Improve the visibility of the RAPID platform through coordinated communications and storytelling. Build a strong RAPID brand by promoting its impact and success stories through media, social media, and partnerships. Raise public awareness to increase trust and engagement with the platform.

○ Value-Addition and Synergy:

Expand RAPID's emergency response coverage to support more affected populations. Improve the quality of response by integrating best practices and building partnerships with diverse organizations. Focus on areas where RAPID can make a unique impact, enhancing coordination and filling gaps in humanitarian efforts.

Key Indicators for the RAPID Activation Phase

Objective	Indicator	Description
Ensure Inclusiveness	Number of registered NGOs by type and size	Tracks diversity of participating NGOs.
Enhance Capacity	Number of RAPID Learning Lab sessions conducted	Measures partner engagement in training programs.
Increase ODA budget	Share of KOICA's humanitarian aid budget allocated to RAPID	Assesses budgetary commitment to RAPID.
Strengthen Visibility	Number of media mentions related to RAPID	Evaluates brand awareness and public engagement.
Value-addition and synergy	Number of beneficiaries of the RAPID assistance	Track the annual number of beneficiaries receiving support through RAPID joint interventions

4.2 Joint Fundraising Platform Phase

The transition to a Joint Fundraising Platform aims to position Korea as a global pivotal player in humanitarian funding by fostering a more inclusive and sustainable model. This phase focuses on three key objectives:

○ Strengthening Global Recognition:

Enhance the international visibility of Korea's joint fundraising platform by actively sharing best practices, success stories, and innovative approaches. Build connections with global fundraising networks,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forums, and engage in ongoing communication to promote Korea's leadership in humanitarian funding.

○ Expanding the Humanitarian Ecosystem:

Broaden the platform's reach by engaging a wider range of stakeholders, including local governments, private companies, media organizations, and academic

institutions. Foster collaboration across sectors to create a strong, interconnected ecosystem that supports humanitarian responses both domestically and globally.

○ **Mobilizing Private Funding:**

Encourage increased financial contributions from the private sector by promoting the val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demonstrating the impact of humanitarian funding. Develop tailored engagement strategies for corporations and philanthropic organizations to secure long-term, flexible funding that strengthens the platform's capacity to respond to crises.

By achieving these objectives, the Joint Fundraising Platform phase will ensure that Korea not only meets global humanitarian standards but also establishes itself as a key player in mobilizing resources for timely and effective emergency responses.

Key Indicators for the Joint Fundraising Platform Phase

Objective	Indicator	Description
Strengthen the platform's global recognition	Number of global partnerships and collaborations Media coverage frequency of the joint fundraising platform	Tracks participation in global fundraising platform networks and the sharing of best practices Tracks the media coverage frequency
Expand the Humanitarian Ecosystem	Number of new partnerships with local governments, private companies, and media organizations	Tracks expansion of partnerships across sectors.
Mobilize private funding	Total funds raised from private sector contributions	Monitors financial contributions from private companies to evaluate success in resource mobilization.

This stage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ublic trust, stakeholder engagement, and regulatory support to ensure successful implementation. Indicators at this stage are designed to capture the platform's growth in visibility, partnerships, and funding impact.

5. Conclusion

The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a comprehensive approach to strengthening Korea's humanitarian PPPs. By learning from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and addressing domestic challenges, RAPID can become a leading model for coordinated disaster response. Key enablers include robust legal frameworks, adaptive funding mechanisms, and transparent governance structures that foster collaboration and accountability.

The proposed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RAPID activation and joint fundraising platform phases provide a roadmap for enhancing stakeholder engagement, resource mobilization, and operational efficiency. The transition to a joint fundraising platform offers an opportunity for Korea to establish itself as a global humanitarian leader.

By implementing these recommendations, Korea can reinforce its commitment to global humanitarian principles and enhance its capacity to respond to crises with agility, inclusivity, and resilience, contributing to more effective and sustainable disaster relief efforts.

인도지원 2025-03-118

인도적 지원 국내 파트너십 발전 방안 연구 국영문 요약

발 행 2025년 01월

발 행 인 장원삼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인도지원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13449)

전 화 1588-0434

팩 스 031)740-0260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경성문화사

I S B N 978-89-6469-632-3 93320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연구자료

인도지원 2025-03-118



인도적 지원 국내 파트너십
발전 방안 연구 국영문 요약



KOICA 한국국제협력단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1588-0434 Fax. 031-740-0260
<https://www.koica.go.kr>